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추진을 지시한 가운데 개방 대상으로 지정된 영산강 죽산보의 물 색깔이 녹조가 진 행되고 있는 상류(사진 아래쪽)와 하류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나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死대강’ 門 연다

문대통령,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6개보 상시개방 지시

사업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정책감사 ... 이명박 정부 겨냥 주목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 상황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에 있는 6개 보를 상시 개방토록 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토록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4대

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죽산보(영산강·고령보·달성보·장녕보·함안보(이상 낙동강)·공주보(금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

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연여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에너지밸리·한전공과대 제2의 도약 계기 마련을

문제인 시대
광주·전남 현안 점검

<4>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거주자 정주여건 개선 시급

참여정부 시절 업적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문제인 정부 출범으로 '시즌 2'를 맞고 있다. 문제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할 수 있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산업 메카 육성과 광주 도시첨단산단을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한전공과대 설립,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 등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문제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2'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빛가람혁신도시 현안 사업들도 정부의 지원 속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은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손꼽힌다. 에너지밸리는 빛가람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한전 등 에너지 분야가 많아 이들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자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은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

한국전력 등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은 지난 3월 현재 200개의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누적 투자금액 8810억원과 608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1조152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망'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검토"

인도적 지원 곧 재개될 듯

통일부는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의 기대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정도가 대북접촉을 신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전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뼈대로 한다.

이덕행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5·18 행방불명자 관리 영망 ▶6면
-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경계 ▶18면
- 이청용 슈틸리케호 승선 ▶20면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